

#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30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7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☐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」을 수용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로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☐ 주요내용

-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 확대 및 성별 평등참여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6조제1항)
  -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.
-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배제를 위한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(안 제9조의2 신설, 안 제10조제3호)
  -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시 『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』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직자(공무수행사인 포함)의 이해충돌 방지법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 관련 조문 신설
  - 현행 조례 제10조제3호(위원의 해촉)를 신설 조례 제9조의2제1항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각 호 규정과 내용이 부합되도록 개정

## ☐ 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## 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- ☐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3】
- ☐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☐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 - 입법예고 : 2023. 9. 5 ~ 9. 25.(20일간)
- ☐ 기타 참고사항
  - 현행 조례 : 【붙임 4】 (국민권익위원회 「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결서」 발췌문 포함)
  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5】

**【붙임 1】**

## **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다”를 “하고,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평가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
5.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·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

지 아니한 경우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 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세 정 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세 정 과 장 배 순 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입관리팀장 이 상 철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 상 철 (행정 2185)

【붙임 2】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	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하고,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9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평가에서 제척된다.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

<p>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<u>이해관계</u> 등으로 인하여 <u>공정한 심의·평가가 불가능</u> 하다고 판단될 때</p>	<p><u>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</u></p> <p>5. <u>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</u></p> <p>② <u>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0조(위원의 해촉)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</u></p>
---	---